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 사천초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1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릉 사천초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1
강원도민일보	22면	도 해양·수산시책 보고회	2
江原日報	온라인	도의회 “어촌지역 인구 소멸 가시화...강원특별법에 해양수...	3
연암뉴스		"강원 어촌 소멸 가시화...해결하려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	4
江原日報	21면	“대원 1만여명 소통·협력 안전한 강원 만들기 최선”	5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원 의정비, 연 6천만 원 넘을 듯	6
江原日報	온라인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한 조례 발...	7
스포츠서울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소방-긴급상황 ...	8
江原日報	07면	샘밭장서 제수용품 사는 김 지사	9
강원도민일보	23면	심은섭 가톨릭관동대 교수 38년 교단생활 마침표	10
江原日報		확 달라진 춘천교육문화관 ... 이용자 중심 쾌적환경 눈길[1...	11
江原日報	온라인	황석우 춘천시학원연합회장 연임	12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평창향교 전교 및 성균관유도회평창군지회장 이...	13
江原日報	온라인	홍천농협 제63기 정기총회 개최	14
江原日報	13면	속초시의원 의정비 150만원으로 가닥	15
강원도민일보	16면	속초시의원 의정활동비 공청회 '인상' 가닥	15
MBC 강원영동	온라인	속초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책정 전망	16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시 전통시장 장보기 앞장 경기 활성화	16
KBS 춘천		고향사랑기부금 1년...배보다 배꼽이 큰 강원도[1/3]	17
江原日報	01면	올림픽 2번이나 치렀는데 ... 빙상장 문 닫을 위기	19
江原日報	05면	밤샘 개표에도 ... 최저시급 못 받는 공무원들	19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문막 앞뜰·뒤뜰 투자선도지구 도전	20
江原日報	02면	춘천 수열클러스터 7년 만에 첫 삽	20
江原日報	04면	춘천고·원주고·영월 상동고 '자율형 공립고' 도전	21
江原日報	14면	태백산 눈축제 10일간 50만명 몰렸다	2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겨울 축제 판 키워야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중소기업 안전에 전폭 예산 투입을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봄철 산불, 빅데이터 활용 등 철저히 대비해야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역필수의사제, 지방 의료 정상화 계기 되기를	25

강원도민일보

2024 02 05 ()

11



강릉 사천초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강릉 사천초 총동문회장이·취임식이 지난 3일 강릉 세인트컨벤션에서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염돈호 전 강릉문화원장,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18대 김정경 회장이 이임하고 제19대 김남동 회장이 취임했다.

2024 02 04 ()

江原日報

[포토뉴스]강릉 사천초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강릉 사천초 18.19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및 개교 100주년 비전선포식이 지난 3일 세인트컨벤션에서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김기영강릉시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김정경회장이 이임하고 제19대 김남동 회장이 취임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5 ()

22



도 해양·수산시책 보고회 2024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시책 보고회가 최근 제2청사 환동해관에서 열려 권혁열 도의장 등 영동권 지역구 강원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강특법 3차 개정안에 '해양이용협의권이양' 등을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2024 02 04 ()

江原日報

도의회 “어촌지역 인구 소멸 가시화...강원특별법에 해양수산 특례 포함 최선”

동해안권 해양 수산분야 2024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시책보고회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비롯해 동해안권 도의원들이 지난 2일 강릉 제2청사 환동해관에서 열린 '2024 해양수산 시책보고회'에 참석해 강원자치도의 해양 수산분야 주요 정책과제와 시책을 점검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을 비롯해 동해안권 도의원들이 지난 2일 강릉 제2청사 환동해관에서 열린 '2024 해양수산 시책보고회'에 참석해 강원자치도의 해양 수산분야 주요 정책과제와 시책을 점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일 강원특별법에 해양 수산 분야 특례를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동해안권 의원들은 이날 강릉 제2청사 환동해관에서 열린 '2024 해양수산 시책 보고회'에서 참석, 강원자치도의 해양 수산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최우홍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이 해양 수산분야 주요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정책을 설명했고 도의원들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시책보고회에서는 지역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대응 시책 발굴, 비어업인들의 불법적 포획 활동에 따른 지역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산 어업인 생존을 위협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어촌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혁열 도의장은 “기후 온난화와 수산자원 고갈로 어업인 수입이 감소하고, 청년인구 유출로 어촌지역 인구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장은 “동해안권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해양이용 협의권 이양’, ‘어촌어항 항만관리’, ‘강원 항만공사 설립’ 등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이 3차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원 어촌 소멸 가시화...해결하려면 강원특별 법 3차 개정 필요"

권혁열 도의장 등 시군 의원들, 올해 해양수산시책 보고 참석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2일 강원도 제2청사에서 열린 '2024 해양수산시책 보고회'에 참석해 현안을 점검하고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권 의장은 "기후 온난화와 수산자원 고갈로 어업인 수입이 감소하며 청년인구 유출로 어촌 지역 인구소멸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주요 시책 추진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 이용 협의권 이양, 어촌 어항 항만관리, 강원 항만 공사 설립 등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시책발굴, 비어업인들의 불법 포획 활동에 따른 지역 어업인 보호 대책 등 수산·어업인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권 의장을 비롯해 동해안 시군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2024 해양수산 시책보고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원 1만여명 소통·협력 안전한 강원 만들기 최선”

우창석 도자율방법범연합회장 취임

우창석 강원특별자치도자율방법범연합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자율방법범연합회는 지난 2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박정하·송기현 국회의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김택수 원주경찰서장, 서천열 대한민국자율방법범중앙회장, 김정윤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최승주 회장 이임 및 11

대 우창석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우창석 신임회장은 정선 출신으로 진광고, 세경대를 졸업했으며 원주 대장1동자율방법범대장, 원주시자율방법범연합대장 등을 맡는 등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우 회장은 “18개 시·군 연합대장과 1만여명의 대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며 “역대 회장들이 만들어 온 길



◇강원특별자치도자율방법범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려 우창석 11대 회장이 취임하고 최승주 10대 회장이 이임했다.

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자율방법범연합회는 도내 18개 시·군 내 250여개 조직, 1만여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

체로 마을마다 인근 지구대(파출소)와 협력해 방법 및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원주=김인규기자

2024 02 02 ()

KBS 춘천

강원도의회 의정비, 연 6천만 원 넘을 듯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어제(1일) 강원도청 제2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 활동비를 현재 150만 원에서 앞으로 200만 원으로 올려주자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원도议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활동비를 합해 기존 5,517만 원에서 6,18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강원도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박성은

2024 02 05 ()

江原日報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한 조례 발의

오는 14일 개최하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발의



박기영 도의원

불법 주 정차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기영(국민의힘.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오는 14일 개최하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견인 비용 지급과 관련한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방활동 방해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견인비용을 지급해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긴급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의 처리에 대해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며 “실수나 오류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2024 02 04 ()

스포츠서울

강원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소방-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안 발의”



[스포츠서울 |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오는 2월 14일 시작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19년 4월 속초-고성 산불 사고 관련 재난 방송에 보도된, 도로에 방치된 다수의 피난민 차량으로 양방향 차선이 모두 막혀있는 장면을 예로 들어 질의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조례안의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은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절차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 조례안에는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비용 지급과 관련 지급 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기영 의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존엄하고 긴급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처리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라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오류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제거하는 것! 또,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례를 통해서 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4 02 05 ()

07



샘밭장서 제수용품 사는 김 지사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박기영·박찬홍·양숙희·임미선 도의원, 도청·시청 직원 등이 4일 춘천 샘밭장터를 찾아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장을 보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05 ()

23



가톨릭관동대 문학박사 심은섭 교수 정년퇴임 기념 비대상시론 출판회가 최근 강릉 포시즌유에서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심오섭 도의원,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엄창섭 가톨릭관동대 명예 교수, 박영봉 청운재 이사장 등을 비롯해 교수, 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심은섭 가톨릭관동대 교수 38년 교단생활 마침표

가톨릭관동대 문학박사 심은섭 교수 정년퇴임 기념 비대상시론 출판회가 최근 강릉 포시즌유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출판회에는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심오섭 도의원,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엄창섭 가톨릭관동대 명예 교수, 박영봉 청운재 이사장 등을 비롯해 교수, 문인 등이 대거 참석해 출판 및 정년퇴임을 축하했다.

김종석 강원도일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공도사 반열에 오른 신 교수님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한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을 위해 더 많이 활동하시고 새로운 길 걸어가시길 바란다”고 밝혔

다. 심은섭 교수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38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도편 달로 무사히 정년퇴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문학인으로서의 행보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교수는 2004년 ‘심상’으로 등단한 뒤 2006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시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집 ‘K과장이 노랑진으로 간 까닭’, 평론집 ‘한국현대시의 표정과 불온성’, ‘상상력과 로컬시학’ 등을 펴냈으며, 현재 김동명학회장을 맡고 있다.

이연제

2024 02 05 ()

江原日報

확 달라진 춘천교육문화관 ... 이용자 중심 쾌적환경 눈길

1985년 개관후 첫 대대적 환경개선 ... 자료실·휴식공간 확장
 이용자 중심 쾌적한 환경 조성 ... 구영웅작가 역사 자료 기증
 강원교육 역사체험프로그램 신청 28일까지 선착순 25명 모집



춘천교육문화관(관장:김순형)은 지난 2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희철·이승진 교육위원, 김학배 춘천·정문걸 철원교육장 등 내빈 및 이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춘천교육문화관(관장:김순형)은 지난 2일 이용자와 함께 재개관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1985년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공간 재배치와 자료실 확장, 카페 휴식공간 등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구영웅 작가가 다수의 역사적 영상자료를 기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재개관식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희철·이승진 교육위원, 김학배 춘천·정문걸 철원교육장 등 내빈 및 이용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문화동아리 '썸프레'의 플루트공연, 환경개선공사 경과보고, 축하, 테이프커팅식,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순형 관장은 "재개관식을 통해서 춘천교육문화관의 새로운 모습을 이용자분들께 널리 알리고,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귀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구영웅 작가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춘천교육문화관이 지역의 독서와 문화·소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김희철 교육위원은 "환경개선공사 기간 소음과 먼지 등을 인내해 주신 인근지역 주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제 지역구인 만큼 춘천교육문화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교육문화관은 기존 종합자료실을 제1.2 자료실로 확장해 열람 및 장서 비치 공간을 확보하고, 책 읽어주는 로봇과 디지털사서시스템 등 이용자 편리성 증진을 위한 AI 정보기기를 확충했다.

제1자료실(2층)에는 이용이 많은 문학, 역사 등의 도서를 비치했으며 제2자료실(3층)에는 종류, 사회과학 등의 도서와 함께 디지털 코너를 통합 운영해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OTT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춘천교육문화관은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원교육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교육문화관 문헌정보과((033)258-2512)로 하면 된다.

2024 02 04 ()

江原日報

황석우 춘천시학원연합회장 연임

2024 새해 학원장 어울모임 및 제14대 회장 취임식 열려



춘천시학원연합회는 지난 3일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2024 새해 학원장 어울모임 및 제14대 황석우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제14대 (사)춘천시학원연합회장에 황석우(57.춘천 공부의 철인학원장) 현 회장이 연임됐다.

춘천시학원연합회는 지난 3일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2024 새해 학원장 어울모임 및 제14대 황석우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이승진 교육위원, 김운기 춘천시의회 경제위원장 박문영 강원도학원연합회장, 차재훈 강원도학원공제회 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와 학원장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석우 제14대 회장은 "13대 회장으로서 2년간 사교육에 켜어진 오해를 바꾸는 이미지 전환사업을 역점 추진했다"며 "14대에서는 정의로운 학원교육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 만들기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시장 친화적인 맞춤 교육 서비스를 지원해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석우 춘천시학원연합회장



춘천시학원연합회는 지난 3일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2024 새해 학원장 어울모임 및 제14대 황석우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2024 02 04 ()

江原日報**[포토뉴스] 평창향교 전교 및 성균관유도회 평창군지회장 이.취임식**

평창향교 전교 및 성균관유도회 평창군지부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일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유상범 국회의원,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 및 군의원, 지광천, 최종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심상용 전교와 박병승 성균관유도회군지회장이 이임하고 박병승 전교와 황승욱 회장이 취임했다.

2024 02 02 ()

江原日報

홍천농협 제63기 정기총회 개최



홍천농협(조합장:심영주)은 1일 홍천문화원에서 제63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영록 홍천군의회장, 이영욱·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 김광수·용준순·용준식·이광재·황경화 홍천군의원, 김완수 홍천군 경제진흥국장, 박정균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 상무, 전성열 NH농협 홍천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천농협은 지난해 20억3,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출자배당 5%, 조합원 이용고배당 4억5,000만원, 준조합원 이용고배당 1억원 등을 배당했다. 또 2023년 교육지원사업비 21억4,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인력부족 해결, 농업소득 증대 등을 위한 수도작 계약재배 조합원 드론 방제사업, 조합원 건강검진 지원사업, 조합원 생일물품 지원사업, 조합원 한마음대축제 등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홍천농협 비상임 감사 선거를 실시, 홍천읍 이강권 감사와 북방면 차근호 감사가 선출됐다.

심영주 홍천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홍천농협은 활발한 환원사업 전개를 통해 조합원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4 02 05 ()

13

속초시의원 의정비 150만원으로 가닥

반대 의견 없어 ... 7일 결정

【속초】속초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공청회에서 20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지난 2일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일석 속초시 의정비심의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한영환 속초시의정회장과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는 “능력은 있으나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 진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를 갖춰줘야 훌륭한 사람들이 의원이 되고, 속초시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타 시·군의 동향과 속초시의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속초시는 오는 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기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권원근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05 ()

16



속초시는 지난 2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속초시의원 의정활동비 공청회 ‘인상’ 가닥

7일 심의위 거쳐 최종 결정

속초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인상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속초시는 지난 2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속초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속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비는 월정수당

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으며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현재 속초시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281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 총 4138만원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영환 민주평통 속초시협의회장과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가 나섰다. 한 회장은 “의정활동비 지급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번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해도 36.4%가 상승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7일 열리는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때 반영되며 이를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주석 jooseok@kado.net

2024 02 04 ()

MBC 강원영동

속초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책정 전망

홍한표

속초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속초시가 지난 2일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초시는 오는 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기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4 02 05 ()

강원도민일보

11

강릉시 전통시장 장보기 앞장 경기 활성화

8일 도지사·시장 행사 동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유통 활성화·내수진작 기대



확대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중앙·성남시장에서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우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무) 등과 함께 전통시장 합동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강릉을 조성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캠페인도 벌였다.

시 관계자는 "고향의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농산품과 제수 용품을 알뜰하게 구매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재

설명절을 앞두고 강릉시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여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일 설을 맞아 주문진 4개 전통시장에서 김홍규 시장과 김진태 도지사와 함께하는 장보기 행사가 진행돼 지역상권의 소비 촉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8일까지 전통시장 장 보는 날을 운영해 시청 및 유관기관별로

강릉시는 최근 중앙·성남시장에서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우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무) 등과 함께 전통시장 합동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점포 등의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시는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착한 가격업소 이용 권장을 통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지류형(5%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모바일·카드형(1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024 02 02 ()



고향사랑기부금 1년...배보다 배꼽이 큰 강원도



■ 고향사랑기부금 1년의 성적표는?

지난해 1월,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첫 발을 뒀습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대감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빠듯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고마운 단비가 될 거라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전국의 243개 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을 위한 총력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첫해다 보니 어느 동네가 얼마나 더 기부금을 유치했는지, 지자체 사이에 눈치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 성적표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금액을 비공개로 한 지자체들이 적지 않았던 탓에, 자료에 대한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1년 동안 모금액 650억 2,000만 원, 기부 건수는 52만 건'. 행정안전부가 밝힌 고향사랑기부금제의 1년 성과입니다. 모금액이 많은 3개 지역의 순위도 발표했습니다. 1위는 전라남도, 전남의 시군이었습니다. 모두 143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어 경상북도 약 89억 원, 전라북도 84억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모금액 보다 홍보비를 더 썼다?... '배보다 배꼽이 큰 강원도'

강



원도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물

하지만, 상황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1년 동안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모두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애초 목표로 잡았던 7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모금액이 목표액을 밑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금액보다 홍보비 명목으로 쓴 돈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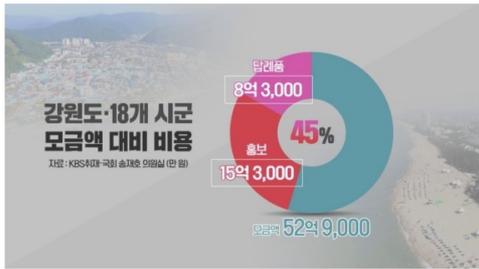
강원도가 지난 1년 동안 홍보비로 쓴 돈은 4억 8,000만 원 가량입니다. 모금액보다 1억 5,000만 원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각종 매체에 광고를 하고, 수도권 지하철역이나 ITX-KTX, 전광판 등에도 광고물을 게재했습니다. 제1회 고향사랑의날 기념식을 비롯해 박람회 등에도 참가하거나, 각종 홍보물을 사는 데도 쓰였습니다.

모금을 위한 비용은 홍보비만 드는 게 아닙니다. 기부자에게 보내는 답례품 비용으로도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각종 행정 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수당 지급, 위탁운영비 등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1년 동안 쓴 돈을 합치면 5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와 답례품 등을 알리기 위해 홍보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만큼, 홍보비에 상한을 두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각 시군과 통합해 홍보를 하는 방안 등 홍보 비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원도와 시군 모금액의 30% 가량이 '홍보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균군의 경우 4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절반 가량인 2억 원을 홍보비와 답례품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척시 역시, 모금액은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두 가지 항목에 지출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지난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모두 5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홍보비로 15억 3,0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전체 모금액의 29%에 이릅니다. 여기에 담례품비까지 더하면, 지출 규모가 모금액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각종 수수료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더 투입되면 그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 등 운영비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입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홍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모금액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 모금을 하는 해였던지라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일단 제도를 알리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 막막했다는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홍보 방식에도 규제가 심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강원도의회 류인출 의원은 강원도를 상대로 3억 원을 모금하자고 5억 원을 들이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제도에 대한 같은 내용을 대부분의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홍보한 만큼, 실적 대비 홍보비 낭비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박상헌 한라대학교 고향사랑기부제 지원센터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행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의 본질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모금 자체를 위해 너무 많은 기회 비용들이 소요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만큼, 홍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08년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례를 연구하면 같은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박상헌 센터장은 홍보비와 관련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일본은 모금에 민간을 참여시켜, 민간이 홍보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홍보비 부담을 거의 지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중복된 홍보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할 중간 기구 마련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꼽았습니다. 지금은 몇가지 방식으로 제한해 놓은 홍보 방식의 다각화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꼽습니다.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시행 2년째를 맞았습니다. 홍보비만 놓고 봤을 때, 다행히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모금액이 기금으로 쌓인 이후에는 운영비의 상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모금액과 운영비용의 문제는 큰 틀에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대목입니다.

기대 속에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의 소멸을 걱정하고, 고향의 발전에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자하는 시민들의 선의를 토대로 자라나야 하는 제도입니다. 작은 정성이 고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효능감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적은 모금액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엄기숙 hotpencil@kbs.co.kr

올림픽 2번이나 치렀는데 ... 빙상장 문 닫을 위기

‘강릉 오벌·하키센터’ 등 활용안 용역 결과 3월 중 발표
도 ‘국가 관리’ vs 정부 ‘용도 전환’ 이견에 진통 불가피
건물 철거까지 거론 ... 국제대회 잇단 성공 개최 빛바래

2024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강릉 올림픽파크 빙상 경기장들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강원2024 개최식이 열렸던 강릉 오벌(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대회 기간 단일 종목 최다인 8만5,000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은 강릉 하키센터, 국내 유일 썰매 경기장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등 3개 경기장의 활용 방안을 결정 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동 연구 용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길 바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과 달리 정부는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하다. 강원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부터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올 3월 발표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용역을 통해 강릉 오벌과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를 전문 체육시설로 전환해 100% 국비로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들 경기장은 강원자치도가 관리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체육계 반대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훈련과 대회 개최를 위한 활용이 어렵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강릉 아이스아레나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경기장)다. 강릉시가 관리 중인 아이스아레나는 링크 대신 마루를 설치해 생활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올림픽을 위해 마루를 철거하고 아이스링크를 새로 조성하면서 9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강원2024가 폐막하면서 아이스아레나에는 다시 마루가 설치될 예정이다.

강릉 올림픽파크 빙상 경기장은 두 번의 올림픽을 완벽히 치러낸 대회 최고 유산이지만 수도권과 거리가 다소 멀다는 이유만으로 빙상 경기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무색게 하고 있다. 그나마 평창 슬라이딩센터만이 월드컵 개최 등 체육 시설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경기장은 국가대표 등 전문 선수 중심으로 이용되는 데다 우수 선수 육성은 국가의 의무”라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경기연맹 등을 찾아가 국비 지원 및 전문 체육시설 이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용도 전환이나 철거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용역에 담긴)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와 강원자치도의 입장 등이 다양하게 담긴 예정이라 아직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기영기자

밤샘 개표에도 ... 최저시급 못 받는 공무원들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수당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는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개표사무원 위촉 거부 서명운동에 착수, 투·개표 종사원 인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투·개표사무원은 14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13만원의 일급을 지급 받는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9,285원으로 올해 최저시급(9,860원)에도 모자란다. 반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 동안 10만

사무원 시급 9,285원 수준
노조 위촉 거부 서명운동 돌입
투·개표 인력 확보 차질 우려
인센티브 등 방안 모색해야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박규민 공무원노조 강원지부 교욱 선전부장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시공휴일에 새벽부터 출근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투·개표 사무에 밤새 투입될 처지”라며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선거사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 위촉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강원지부는 지난달부터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개표사무원 위촉을 거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가 올해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없애겠다며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수검표(手)를 도입, 개표 인력 및 업무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원활한 수검표를 위해 각 시·군별로 최대 20% 이상의 개표사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 19~21대 총선 당시 투입된 개표사무원 수는 평균 2,147명이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는 400여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2024 02 05 ()

10

강원도민일보

원주 문막 앞뜰·뒤뜰 투자선도지구 도전

시, 공모 제안서 작성 용역 발주
당위성 등 개발 사업 유치 목표
시-LH공동 추진 가능성 확대

장기답보상태인 원주 문막 앞뜰, 뒤
뜰 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주시는 문막읍 문막리 일원을 대
상으로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 중

이다. 대상지는 문막 앞뜰 23만㎡와
뒤뜰 31만㎡ 등 총 54만㎡다.

이중 문막 앞뜰 지구는 수년간 도
시개발사업대상지로 지목돼 온 지역
이다. 지난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
으나, 2018년 재조사 결과, 복선전철
건설, 간헐관광지 개발 등 주변 개발
호재로 사업성을 입증, 추진에 청신
호가 켜졌다.

하지만 당시 분석된 1200억원대
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발목을 잡았

다. 다행히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
사(LH)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 시 사
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 추진 가능성을 다시 열
었다. 인근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부
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해
첫삽을 뜨며 본격화된 점이 크게 작
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문막 앞뜰과 뒤뜰
지구에 대한 산업연계형 투자선도지
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남원주역
세권에 이어 원주에서 추진하는 두번

째 투자선도지구 시도다. 남원주역
세권 투자선도지구는 무실동 원주역
일원 46만9830㎡에 시와 LH가 1대
9의 지분으로 총 3400억원을 투입해
공동 추진했다.

시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제안을 위
한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를 통해
당위성 개발, 세부 추진전략 및 투자
유치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막 일대의 새로운 발전
을 위해 심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
했다. 정태욱

2024 02 05 ()

02

江原日報

춘천 수열클러스터 7년 만에 첫 삽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가 착공에 들어가 올해부터 사업에
속도를 낸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착공계가 접수됐고 이달 말부
터 지장물 철거와 하천변 저지대 성
토 등의 토목 공사를 위한 기초 작업
이 시작된다. 토지 소유권은 90% 확
보됐고 나머지에 대한 수용 절차는
상반기 중 마무리된다. 2017년 국토
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된
후 7년 만에 첫 삽을 뜨는 것이다.

소양강댐의 냉수를 자원으로 활용
하는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는
K-클라우드파크와 물-에너지 집적
단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친환경

이달 말 토목 기초 작업 착수
클라우드데이터센터 7기 건설
소양강댐 냉수 자원 활용 계획
국내 IT 대기업과 매각 협의중

경 생태주거단지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시설은 K-클라우드파크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7기가 집적단
지를 이를 예정이며 유관 기업 300개
가 입주해 데이터 산업 융합밸리를
구성한다. 7기의 클라우드데이터센
터 각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하
이퍼스케일 시설로, 총 220메가와트
(MW) 용량의 초대형 규모로 이어질 예

정이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해
기업 성장 지원 체계를 갖춘다.

클러스터 조성 부지는 동면 지내리
일원 81만6,000㎡다. 총 사업비는 4,
146억원이 투입되며 준공 목표는
2027년이다. 사업비의 78%가 민간
투자로 채워지는 만큼 부지 분양 성
과에서 사업 성과가 갈릴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와 춘천시는 지난해 11
월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 클라
우드데이터센터 부지 1곳의 분양을
시도했으나 응찰 기업이 없어 5월 이
후 재공고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
간 상태다. 다만 여전히 국내 IT 대

기업과 부지 매각을 위한 협의가 지
속되고 있고 K-water에서 전담팀
을 꾸려 연내 투자 유치 마케팅에 주
력하는 만큼 성과가 기대된다. 강원
자치도 역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건에 최대 350억원
의 통 큰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박순무 춘천시 디지털산업과장은
"토지 정리와 신복을 연결도로 확장
등의 기반 공사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도, 춘천시가 시설 구축과 기업 유
치,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
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江原日報

2024 02 05 ()
04

춘천고·원주고·영월 상동고 ‘자율형 공립고’ 도전

강원지역 첫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에 도전할 학교가 춘천고, 원주고, 영월 상동고로 결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지난 2일 오성배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춘천고, 원주고, 상동고 등 도내 3개 고교를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신청 학교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자공고로 확정된다. 도교육청은 8일 마감인 신청서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을 교육부에 요청하면서까지 신청 학교들이 자공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보강할 계획이다. 춘천고는 비전으로 ‘과학중점학교-과학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이공계 인재육성’을 제시했으며, 원주고는 ‘과학중점학교-수학·과학·인문·예술영역에 학력을 고루 갖춘 전인

춘천·원주고 과학중점학교 비전 교육발전특구 시너지 효과 기대 교육부 22일 50여곳 추가 선정 적 인재육성’을, 상동고는 ‘영월군·지역사회와 연계한 대한민국 최초의 야구 전문고등학교’를 내세웠다. 춘천고와 원주고는 해당 지자체의 ‘교육발전특구’ 신청과 맞물려 높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경주 춘천고 교장은 “기숙사 전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기존에 확보해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한다”며 “개교 100주년을 맞아 혁신을 꿈꾸는 춘천고의 도전에 동문 및 지역주민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원용선 원주고 교장은 “교육발전특구에 도전하는 원주시와 보조를 맞춰 함께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공고에 신청하게 됐다”며 “교직원들의 참여 열기와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 기존 31개 자공고 및 신규 신청학교 중에서 총 50곳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자공고는 학사 운영과 교사 선발, 학생 우선 선발 등에서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다. 자공고로 지정되면 매년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된다. 해당 지역 지자체와 교육청도 함께 1억원 가량을 매칭해 지원한다. 강동희기자 yulnyo@

江原日報

2024 02 05 ()
14

태백산 눈축제 10일간 50만명 몰렸다

눈조각 전시·전통놀이 체험 등 관광객 북적
도심 연계 프로그램 경제성 강화 목소리도

【태백】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제31회 태백산 눈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5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지난달 26일 개막해 4일까지 10일간 펼쳐진 제31회 태백산 눈축제는 고원도시 태백을 순백의 겨울왕국으로 변모시켰다. ‘NOW OR NEVER - 지금, 여기, 태백’을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는 태백산국립공원, 태백문화광장 및 황지연못 등에서 펼쳐졌다. 눈조각 경연대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눈조각 전시, 전통놀

이 체험, 공연 및 이벤트, 태백산 눈꽃 등반대회, 이글루 카페, 스노볼 포토존 등이 인기를 끌었다. 소망메시지 카드달기, 눈미끄럼틀·얼음썰매장, 캐리와 장난감 키즈파크 등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 특별한 겨울 체험을 즐겼다. 지난 3일 연화산과 대조봉 일대에서 펼쳐진 태백 스노우 트레일 런 대회에는 600여명의 참가자가 눈 덮인 산길을 질주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태백시는 출향단체도 축제에 초대했다. 축제 이튿날인 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제31회 태백산 눈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난달 27일부터 전국 각지의 7개 출향단체에서 370명이 축제장을 찾아 풍성한 고향의 정을 느꼈다. 다만 상당수 단체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와 축제만 즐기고 곧바로 돌아가며 시내 상경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내년

부터는 도심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앞으로도 지역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로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kwk635@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2 05 ()

/ 19

강원 겨울 축제 판 키워야

-규모·프로그램 확대... 신규 축제 마련 필요

화천 산천어축제를 포함해 도내에서 열린 겨울 축제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 특성상, 강원도는 겨울 축제의 최적지입니다. 인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축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날씨 등 여러 환경이 뒤받쳐 주지 않아 제대로 치러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도내 겨울 축제는 여행 경기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가 더욱 발전하고, 특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개최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소재를 발굴해 신규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3일간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린 화천산천어축제는 이름에 걸맞은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누적 방문객 154만 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최고 겨울 축제의 흥행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8만 명을 넘어서며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지난 26일 개막해 2월 4일까지 열리는 태백산 눈축제장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평창 대관령눈꽃축제는, 지난 27일 대관령면 황계리 송천

축제장에서 개막해 2월 11일까지 열려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의 경제 효과는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산천어 축제 결과를 조사한 강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6만6022원으로 지역에 미친 직접 경제 효과는 약 865억2000여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98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뒀으며 설문에 응한 지역업체 중 40% 이상이 평소 대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 축제는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축제 간 벤치마킹을 통해, 호응을 얻은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축제도 개최할 여지가 많습니다. 강릉의 관광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활용할 겨울 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양구군도 겨울 축제 개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기존 축제 개최지에 인근 지역 축제가 새로 생긴다면 당일 여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1박 이상 강원도에 머무르는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눈·얼음 축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도 전역에서 겨울 특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5 ()

/ 19

중소기업 안전에 전폭 예산 투입을

-중앙부처 앞장서야 산재사망 및 소규모업체법 위반 막아

평장에서 축사 지붕에 올라가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기업 종사자 1명이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락사방지 설비 및 안전장구를 갖추면 가벼운 부상으로도 그칠 수도 있었으나, 5m 높이의 고공작업 과정에서 채광창을 밟으면서 그대로 추락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1월 31일 발생한 이 중대사고는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도내 첫 산재사고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부산에서 전국 첫 사례가 나온지 30분 만에 발생한 사고”라며 “노동자의 생명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라져가는 현장에서 법은 도대체 어디 있냐”면서 질타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현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성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는 안전 조치 미흡과 안전의식 결여가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며 법에 따른 엄정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후조사나 강제 이행 등의 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에 대폭적인 재정과 인력을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2년 전 5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하면서 2022년 상반기

에 사고 건수는 31건이 줄고, 사망자는 2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곧 법 적용 직후 6개월 동안 산재 통계에서 사망 사고가 줄어든 효과를 나타냈기에 올 1월 중소기업의 확대 적용에서도 과거와 같은 산재사망을 억제하는 성과를 내도록 중앙부처는 전방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많은 시간을 안전관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재정 및 인력의 한계로 안전관리자의 겸직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전혀 동떨어진 업무를 겸직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안전관리가 작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불보듯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따른 현실적 고충을 덜고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 순조롭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대개 중대 사망사고는 50인 이상보다는 50인 미만에서 발생, 이미 지난 2년 동안 법 적용을 미뤘기에 근로자 생명 보호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습니다. 중앙부처가 앞장서지 않으면 중대 산재사고 반복 및 중소기업의 법 위반을 막기 어렵습니다.

江原日報

2024 02 05 ()

/ 19

봄철 산불, 빅데이터 활용 등 철저히 대비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등 산불 유관기관들이 지난달 29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협의회를 열어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시·군,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북부·동부지방산림청, 육군 3군단, 해군 1함대사령부, 한국전력공사,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등 도내 44개 산불 방지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봄철 산불은 3~4월쯤에 집중되는데 미리 협의회를 통해 사전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무려 8일간 동해안 일대의 산림 2만3,794ha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2004년의 산불이나 2019년 4월의 고성 산불이 떠오른다. 인명과 재산뿐 아니라 산림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드는 봄철 동시다발성 산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 또한 빨라져야 할 것이다.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전신주 누전, 방화, 실화 등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대응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이에 대한 영상을 제공해 누구나 산불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

써야 한다. 산불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은 초기 신속한 진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소홀해선 안 된다. 산불이 꽃 소식보다 먼저 봄을 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협의회는 피해면적이 3,000ha 이상일 경우에만 산불진화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었던 운영 기준을 올해부터 피해면적 100ha 이상일 때도 도지사가 총동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해 산불 발생지역 예측과 화재 예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예방·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적극 활용해 시·군 단위부터 산불에 대응하도록 해야 할 때다. 산불 다발지역의 산불 유형, 지역적 특성, 강수량, 풍속, 풍향, 기온, 습도 등 기후 데이터 등의 정보들을 사전 분석해 화재 예방, 대피, 화재 진압·복구에 십분이 용해야 한다.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산불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비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부족한 산불 예방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江原日報

2024 02 05 ()

/ 19

지역필수의사제, 지방 의료 정상화 계기 되기를

도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2014년 11명에서 2023년 4명으로 10년 만에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도내 대학병원이 지난해 말 2024년도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2023년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다. 충원하지 못할 경우 입원치료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최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개최된 ‘강원남부권 지역의료혁신과 특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조희숙 강원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치료가능 사망률 분석에서 동해권이 52.29%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필수의료 분야

도내 필수의료 공백으로 도민 생명권 위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개혁 정책 제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해 불균형 해소해야

(심혈관)의 자체충족률도 5.9%에 그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멀고 의료인프라가 취약하며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 의료 혁신의 타당성을 역설했던 이유다. 지역 필수의료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마침 정부가 지난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필수의사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의사에게 장학금과 수련·거주 비용 등을 지원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으로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

역의 처지를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의사들의 서울, 수도권 쏠림이 가져온 피해는 심각하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다반사다. 산모들은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을 위해 길을 헤매고 다닌다. 많은 이가 의료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명감만으로 의사를 붙잡아 놓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일은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계의 환경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제를 도입하고,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을 대상으로 혁신형수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것도 그런 차원이다.

무너진 필수·지역 의료 현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지금 지역 의료 현실은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함께 의료 인프라 붕괴로 가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명권과 건강권마저 잃고 사실상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필수의료 회생을 위해 걱정하고 ‘공공의 메스’를 꺼내든 만큼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 특히 지역필수의사제의 근본 취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료가 매우 중요한데 그 확충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공언했듯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